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에너지·AI 중심 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AI 산업도시로 육성”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40년 가까이 분리돼 있던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정부로 출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행정 통합 이후 도시 구조와 산업 전략, 균형 발전 모델을 사실상 새로 설계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를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남·광주의 산업 지형과 도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부터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통합 인센티브 20조원, 에너지·AI·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투자 재생에너지 기반 초저가 전력 구축...에너지공사 설립 등 추진 서남권·광주권·동부권 3축 발전...항만·공항 연계 산업벨트 구상

-초대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임하는 각오는.

△전남과 광주는 지난 10년 동안 각각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창원시 통합 사례에서 보듯 통합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다. 1999년 전남도의회 시절부터 두 지역 분리를 반대해 왔고 행정통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제명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된 과제이자, 정치적으로도 책임지고 추진해 온 일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단순한 행정 수장이 아니라 신남방을 향한 새로운 성장축과 분권형 자치정부의 첫 단추를 꿴 자리다.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온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유는.

△8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것도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3선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내며 중앙과 지방, 청와대와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통합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처음부터 이끌어 온 당사자다. 종이 위에 그려진 통합 구상을 실제 도시와 산업, 일자리와 청년의 삶으로 구현하는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 컸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를 떠나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실험의 현장에 나섰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광역정부로 출범한다. 구상하는 통합특별시의 미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이자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정부'를 목표로 한다. 광주의 AI·미래차·반도체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농생명·해양 산업을 결합하고, 여수·광양항과 김대중공항·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해 글로벌 사우스와 신남방을 향한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중앙 의존형 지방정부에서 벗어나 재정·인사·도시계획 권한을 과감히 이양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분권형 특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반값 전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산업 전략은.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삼성이나 구갈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이나 CF100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 전남과 광주가 사실상 유일하다.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유치했고 한국 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해 연구개발 기반도 구축했다. 여기에 인공태양 연구시설까지 확보했다. 통합특별시가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업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기반 초저가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전남·광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 kWh당 90원 수준의 ‘반값 전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100만 평 규모

의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4곳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공사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PPA) 구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산단마다 1000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활용 방향은.

△연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의 향후 30년을 좌우할 전략 자산이다. 이 재원을 에너지·AI·반도체·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광역교통망과 생활 SOC 확충, 교육·연구·인재 양성 등 세 축으로 나눠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정 비율은 권역과 시·군·구에 자동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광역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해 그 성과가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이후 동부권·서부권·광주 간 균형발전 전략은.

△통합이 광주 중심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실패한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구상을 통해 서남권·광주권·동부권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3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서남권과 혁신도시 권역에는 에너지·농생명 산업과 행정 기능을, 광주권에는 교육·문화·AI와 도시 서비스 기능을, 동부권에는 수출 제조와 항만·물류 기능을 집중 배치하는 구조다. 동시에 재정과 인사, 인프라 투자에서 권역별 최소 보장 규칙을 두고 권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해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통합청사 위치 논쟁에 대한 입장은.

△통합청사 문제는 통합시장 개인의 결단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시민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다. 2005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 당시

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 과정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입지 기준을 정하고 자료를 공개한 뒤 속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 지역의 승패가 아니라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통합 경선에 부합한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추진력과 돌파력, 협업 능력이다. 전남과 광주, 동부권과 서부권, 농어촌과 도시 등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면서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첫째는 추진력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돌파력이다. 통합특별시는 에너지·산업·교통·공공·청사·공공기관 이전 등 수십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이해하고 예산과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집행 능력이 중요하다.

셋째는 비전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업 능력이다.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와 산업 대전환 구상을 시민과 기업, 중앙정부,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청와대와 국회, 행안위원장을 거치며 이러한 행정·정치 협업을 축적해 왔다.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 경쟁이 아니라 통합을 완성하고 미래 비전을 실행할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을 현장에서 이끌어 온 정치적 경험이 있다. 검찰개혁과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당의 개혁 과제 역시 앞에서 추진해 왔다. 신남방을 향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에너지·AI·농생명 산업을 결합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광주 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청와대 신년인사회



전남도지사 출마기자회견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투어



영산포풍물시장